

참여자치연대 정책자료

발행일 2026. 04.22.

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중단해야 할 worst 34개 정책 -

목차

목차	2
요약	3
서울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5
인천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7
대전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9
세종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11
충북도지사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13
울산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14
대구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17
부산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20
제주도지사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22

6·3 지방선거가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4/22),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 단체들이 제안한 「시장님, 이것만은 하지 마오!」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당선 이후 반드시 중단해야 할 **worst 정책 34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각 지역 단체들이 이번에 발표한 **worst 34개 정책**은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로서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 낭비 사업, 환경 및 생태계를 훼손하는 사업,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간 위탁 사업, 단체장의 치적 쌓기 정책사업 등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 발표한 **worst 정책**을 각 정당에 전달하는 것은 물론,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에게도 전달하여 **worst 정책 중단**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중요 앞을 초고층 개발지로 만드는 세운지구 재개발
 - 한강을 생태공간이 아닌 개발상품으로 만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 남산 곤돌라 설치 추진
 - 녹지를 명분으로 한 초고층 난개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사업
 -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추진

- 인천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인천평화복지연대
 - F1(Formula One) 자동차경주대회 인천개최 추진
 - 남촌일단산업단지 추진
 - 인천상륙작전 대규모 기념 사업화

- 대전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보물산 프로젝트
 - 클래식음악전용 공연장
 - 고향사랑기부금 '과학자 시계탑' 건립

- 세종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보 재가동
 - 금강수목원 민간매각
 - 국제정원도시박람회

- 충북도지사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충북레이크파크르네상스 청남대 개발사업
- 울산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울산시민연대
- 울산왜성 해자 복원(울산학성 물길 복원) 사업
 - 태화강 보트사업
 - 공업축제
- 울주군수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울산시민연대
- 간절곶 식물원
 - 신규 핵발전소 유치
- 남구청장,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울산시민연대
- 외항강 문학상
- 대구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대구참여연대
- 낙동강 보 가동
 - 박정희 우상화 사업
 -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
 - 졸속적 대구경북 행정통합
- 부산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부산참여연대
- 이기대예술공원과 풍피두센터 분관 건립 추진
 - 황령산 난개발 추진
 - 해안가 유희부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여협상제 추진
 - 낙동강의 철새를 떠나게 하고 낙동강 생태를 파괴하는 대저대교 추진
- 제주도지사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제주참여환경연대
- 도민 결정 없는 제주제2공항 강행 추진
 - 한화애월포레스트 사업 허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 무분별한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
 - 돈먹는 하마, 제주-칭다오 화물선 운항
 - 대중교통 BRT 졸속 사업 추진

서울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제안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의	02-2039-8361 / cfoi@opengirok.or.kr

1. 종묘 앞을 초고층 개발지로 만드는 세운지구 재개발

-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은 서울 도심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대표적인 개발 사업임.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세운지구 일대는 단순한 개발 대상지가 아니라 역사·문화·도시경관을 함께 고려해야 할 공간임. 그런데도 서울시는 이 일대를 초고층·초고밀 방식으로 재개발하려 하며, 높이 규제 완화와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개발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 주변 경관 훼손, 과도한 개발이익의 민간 귀속,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서울의 역사적 중심부를 민간 개발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은 결코 서울의 미래가 될 수 없음.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은 중단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공공성 회복을 기준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함.

2. 한강을 생태공간이 아닌 개발상품으로 만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 서울시는 민선 8기 핵심사업으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한강을 수상교통, 관광, 상업 중심 공간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음. 한강버스, 크루즈, 수변 상업시설 등 각종 사업이 추진되며, 한강은 시민 모두의 생태 공간이 아니라 개발과 소비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음.
- 그러나 한강은 단순한 관광이나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서울의 핵심 생태축이자 공공자산임. 이런 개발 중심 정책은 공공성, 타당성, 안전성 논란을 낳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성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역행하고 있음. 한강을 더 많이 띄우고 짓고 파는 공간으로 만드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함. 서울시는 한강을 개발의 무대가 아니라 자연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생명의 강으로 전환해야 함.

3. 남산 곤돌라 설치 추진

- 서울시는 남산 일대에 관광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이유로 곤돌라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인 녹지축이자 생태·경관 자산으로, 보존과 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공간임. 그럼에도 서울시는 남산을 또 하나의 관광상품과 수익사업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음.
- 남산 곤돌라 설치는 생태 훼손과 경관 훼손 논란을 낳고 있으며, 시민의 보행과 공공적 이용 확대보다 관광개발을 우선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큼. 이미 남산은 과도한 시설 집중과 관광개발로 부담이 큰 공간임. 남산 곤돌라 설치 서울의 대표 자연공간을 또 하나의 개발사업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함.
- 서울시는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의 공공기여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신규 곤돌라 수익으로 남산 생태환경 회복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독점과 공공성 문제는 그 자체로 해소해야 할 과제이지, 유사 시설을 추가로 조성해야 할 사유가 되지 않음. 2026년 궤도운송법이 개정되어 20년 이상 장기 운영한 궤도 사업의 사업권을 지자체가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새로 곤돌라를 개발하기보다 공공이 기존 시설을 인수·현대화하여 운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4. 녹지를 명분으로 한 초고층 난개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사업

-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라는 이름으로 도심부 일대의 대규모 정비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업은 이름과 달리 녹지와 생태의 회복보다는 높이 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초고층 개발을 가능하게 해 민간 개발이익을 확대하는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겉으로는 녹지 확충과 도심 재생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사업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큼. 이는 서울 도심의 역사성, 생활권, 보행환경,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또 다른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음. 서울 도심은 더 높은 건물과 더 큰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함.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사업은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함.

5.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추진

-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광화문광장은 서울 시민의 일상과 집회, 토론, 기억이 교차하는 대표적인 공공광장으로, 특정한 국가주의 상징사업이나 치적성 기념사업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됨.
-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광장을 상징 조형물 중심의 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은 광장의 공공성과 개방성을 훼손하는 일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민 모두의 공간을

특정한 메시지의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은 서울시가 우선해야 할 정책도 아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은 중단하고, 광장을 시민의 일상과 민주주의를 위한
열린 공공공간으로 유지해야 함

인천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제안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
문의	032-423-9708

1. F1(Formula One) 자동차경주대회 인천개최 추진

- 인천시는 F1을 인천도심(송도, 영종, 청라 검토 중)에서 개최 추진 중
- 인천시 조직 내 전담조직을 만들고 개최를 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
- 인천 F1 개최 시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을 추정,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대규모 혈세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
- F1 추진 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다 보니 대부분의 계획이 비공개, 행정절차(시의회 청취 등) 무시
- 2010년 전남 영암에서 개최된 F1은 대규모 혈세 낭비와 최악의 국제행사로 평가받음.

2. 남촌일반산업단지 추진

- 남촌일반산업단지는 인천시 남동구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일대를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는 사업
- 도심 내에 위치한 곳으로 산단이 들어설 경우 인근에 선학초등학교, 선학중학교를 비롯한 학교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시민들을 건강에 큰 피해를 주게 됨.
- 또한 남촌산단 부근에 2만호 공동주택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환경과 건강 피해를 더 가중시키게 됨.
- 2021년 인천시 민선7기(박남춘 시장) 때 주민수용성 문제로 중단 됨, 민선8기(유정복 시장) 때 남동구청장의 추진 의사로 인천시가 행정절차를 재추진 함.
- 2024년 4월 남촌일반산단이 영향을 주는 국회의원(맹성규 의원, 박찬대 의원, 이훈기 의원) 공동의 남촌산단 중단 촉구 성명 발표

3. 인천상륙작전 대규모 기념 사업화

- 인천시 민선8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대규모 국제기념행사로 추진 중
- 2023년 부터 기념행사를 대규모화 추진
- 2024년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대규모 행사 개최 함
- 2025년 정부 예산 축소되었으나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대규모 행사 개최
- 이후 송도에 위치한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을 월미도로 이전하거나 인천상륙작전 전쟁기념관을 추진 예정
- 인천상륙작전 기념화하는 것은 남북관계, 대중국 관계에 갈등의 요소로 여겨지고, 평화도시 인천보다는 전쟁을 상징하는 도시로 이미지화하는 것임.
- 한반도 평화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천상륙작전을 대규모 기념화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함.

대전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제안단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의	042-331--0092 / djcham@hanmail.net

1. 보물산 프로젝트: 경제성 없는 무리한 개발 계획

- 대전시가 추진 중인 이른바 '보물산 프로젝트'는 대전의 중심 녹지 축인 보문산 일대에 최고 **215m**의 고층 전망타워와 **2.4km** 구간의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조성하는 매머드급 관광지구 개발 사업임.
- 보문산에 고층 타워와 케이블카를 짓겠다는 계획은, 민간 기업들조차 '적자'를 우려해 도망친 고위험 사업임. 대전시는 이를 무시하고 시의 빚을 내어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의 보금자리가 영구적으로 파괴될 위기에 처했음. 게다가 이미 보문산에는 기존 전망대 자리에 신규 전망대가 설치된 상태로, 여기에 추가적인 고층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은 중복투자이기도 함.
-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임. 당초 대전시는 **1,500억** 원의 재원을 민간 자본으로 조달하려 했으나, 두 차례 공모 모두 유찰되었고 초기 관심을 보이던 기업들마저 투자를 전면 철회했음. 그러나 대전시는 오히려 대전도시공사의 자체 사업(공사채 발행)으로 밀어붙이는 '공영개발'로 무리하게 전환했음. 이 과정에서 타당성 용역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0.975**로 산출되었으나, 시민단체가 실제 운영 수익만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B/C는 **0.297**에 불과함. 보문산은 거대한 고철 구조물을 이고 알아야 할 곳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대전의 소중한 생태 자산이므로 본 사업은 즉각 전면 백지화되어야 함.

2. 중촌근린공원을 부수고 만들겠다는 클래식음악전용 공연장

-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 인프라 확충을 명분으로, 중구 중촌근린공원 부지에 **3,3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500석** 규모의 클래식 음악 전용 공연장 등을 포함한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다른 지자체와 비교한다면, **2024년 8월** 성공적으로 준공된 부산 콘서트홀의 경우, 국비를 포함해 총 **1,107억** 원을 들여 **2,411석** 규모로 준공했음. 반면, 대전시가 짓겠다는 공연장은 좌석 규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무려 **3배**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했음. 대전시는 '명품 건축물'을 짓기 위한 과감한 투자라고 핑계를 대지만, 실제 없는 디자인적 수식어 하나로 2,200억 원이라는 차액을 설명할 수 없음. 게다가 대전시는 이 예산을 전액 시비로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대전시는 18년간 300억원을 들여 이제 막 완성한 중촌근린공원 자리에 클래식음악전용 공연장을 건설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어, 매몰비용과 철거비용까지 낭비될 우려가 있기에 해당 사업은 철회되어야 함.

3. 고향사랑기부금 '과학자 시계탑' 건립: 기부제도 취지의 악의적 훼손

- 대전시는 2025년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7억원 예산 규모의 과학자 시계탑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는 고향사랑기부금 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시민들의 선의와 호혜의 마음을 배신하는 상징적인 사업임.
-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된 제도로, 관련 법률(제11조 2항)은 이 기금의 사용 목적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 등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웃 충남 청양군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무료 점심에, 금산군이 지역 내 유일한 응급실 간호 인력 지원에, 심지어 같은 지역의 자치단체인 대전 중구청조차 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에 기부금을 사용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음.
- 그러나 대전시는 시민들의 선한 마음으로 모인 누적 기금 중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7억 원을 떼어내, 유성구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 광장에 야간 조명과 홀로그램 기능이 들어간 화려한 '과학자 시계탑' 조형물을 세우기로 결정했음. 복지와 돌봄의 최전선 사각지대에 투입되어야 할 피 같은 공익 재원을 시장의 치적 쌓기용 전시성 구조물 건립에 쏟아붓는 것은 기부제도의 공공성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전시행정이자 위법적 행정임.

세종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제안단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문의	044-868-0015 / sejongcham@gmail.com

1. 세종보 재가동

-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보 재가동 정책은 금강 세종보의 수문을 닫아 물을 채움으로써 가뭄 사태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하며 세종보에 담수된 물을 활용해 수상 레저 공간을 조성하고, 세종보 인근을 관광 명소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임.
- 문제는 보를 닫아 물의 흐름이 정체되면 유속이 느려져 수온이 상승하고, 미호강 등에서 유입되는 영양물질로 인해 녹조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큼. 물이 고이면서 강바닥에 펄이 쌓이고, 이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시민들의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호흡기를 통해 마이크로시스틴과 같은 독소 물질이 들어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됨.
- 뿐만 아니라 수문 개방 후 형성된 모래톱에 돌아온 흰수마자, 미호종개 등 희귀 어류와 흰목물떼새와 같은 조류의 서식지가 수위 상승으로 인해 사라지고 물을 채우고 빠는 과정에서 수위가 급격히 변동되면 수변 생태계에 큰 혼란을 주어 생물종들이 적응하기 어렵게 됨. 이미 세종보는 가동보 특성상 모래 유입으로 인한 잦은 고장이 고질적인 문제였으며, 이를 고치는 데 매년 상당한 세금이 투입되어 예산 낭비가 지속되어 왔음.

2. 금강수목원 민간매각

-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은 소유주인 충청남도가 산림자원연구소를 충남 청양군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금강수목원 부지를 민간에 팔겠다는 계획임. 세종시 출범 당시 행정구역은 세종시이지만 소유권은 충남도가 가진 기형적 구조인 행정불일치에서 비롯되어 세종시는 인허가권을 활용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충남도는 재정 확보를 위해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음.
- 민간에 매각될 경우 3500억에 해당하는 매각 예정가를 회수하기 위해서 골프장,

리조트, 아파트 등 상업 시설로 개발이 불보듯 뻔해 지난 30년간 가꾼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깊고, 그동안 연간 20만 명 이상이 찾는 산림 휴식처이자 생태 교육장이었던 수목원이라는 공공의 자산을 땅장사하듯 처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임.

- 현재 세종시는 매각이 되더라도 인허가권을 행사하여 난개발을 막겠다고 하지만,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 개발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됨. 세종시는 금강수목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인허가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유화와 공공산림자원화 할 방법을 찾아야 함.

3. 국제정원도시박람회

-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세종시를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알리고 정원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아래 기획된 대규모 국제 행사임. 그런데 박람회 개최 시기가 지방선거 직전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목적보다 시장 개인의 재선을 위한 치적 쌓기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개최 시기를 하반기로 늦추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현재 정상적인 추진은 어려운 상황임.
- 현재 세종시는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수백억 원의 예산을 행사성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함. 시에서 예상하는 박람회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구조가 구체적이지 않고, 입장료 수익 등에 대한 계산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오히려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 더군다나 울산이나 충남 태안 등 다른 지역의 정원 박람회와 비교했을 때 세종시만의 확실한 경쟁력이나 차별화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왔음.
- 세종시는 이미 전체 도시 면적의 52% 녹지율을 자랑하고 있음. 인공적으로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보여주기식 박람회가 아니라, 원수산과 전월산, 중앙공원와 호수공원, 장남들판과 금강을 잇는 생태축을 보존하는 생태환경 정책이 필요함.

충북도지사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제안단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문의	043-267-0151 / cbcitizen043@gmail.com

1. 레이크파크르네상스라는 허울좋은 이름하에 추진되는 청남대 개발사업

- 충북도는 ‘충북레이크파크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9조 원이 넘는 규모의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업은 강과 호수뿐 아니라 산과 도시까지 충북 전역을 아우르며,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지역 숙원사업을 하나로 묶은 성격이 강해 정책의 실체와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특히 이 가운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식수원 보호 원칙과 충돌하는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함. 대청호는 충북뿐 아니라 중부권 시민들의 핵심 식수원으로 무엇보다 보호가 우선되어야 할 공감임에도 불구하고, 청남대 일대에서는 모노레인, 상업시설, 체류형 프로그램 등 관광 개발이 확대되며 상수원 보호구역의 성격이 점차 훼손되고 있음. 이러한 개발은 단순한 개별 사업을 넘어 이용객 증가와 함께 오염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 번 완화된 규제는 추가 개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큼.
- 또한 기존 예약제로 운영되던 청남대 입장이 폐지되면서 방문객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더불어 셔틀버스 운영이 중단되면서 기존 매표소 주변 상권이 위축되는 등 지역과의 상생 기반 역시 흔들리고 있음.
- 또한 청남대는 공공성과 상징성을 가진 공간임에도 현재는 체류형 관광과 상업시설 중심으로 재편되며 공공자산의 성격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문제임. 결국 관광 개발을 우선하는 정책 방향은 지속적이지 않으며, 차기 도정에서는 청남대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울산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제안단체	울산시민연대
문의	052-256-0009 / hope@hopeulsan.net

□ 울산광역시장

1. 울산왜성 해자 복원(울산학성 물길 복원) 사업

- 울산시가 발표한 학성공원 물길 복원 사업은 7천억 원에 육박하는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냄. 민간개발 방식의 대규모 부동산 사업이라는 점에서 선언적 형태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음.
- 설령 진행된다 하더라도 도심 한복판에서 용적을 완화 등의 조건을 내건 대규모 개발허가를 전제로 하는 구조 역시 문제임.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로 작용할 소지가 큼. 공공기여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발이익 중심 사업으로 흐를 위험이 큼.
-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임. 사업안 발표시 중구의회조차 사전에 공유받지 못할 정도로 지역사회 논의 없이 추진된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더 나아가 사업 추진 시 불가피한 이주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불투명함. 최근 도심 부동산 가격을 고려할 때 정당한 주거보상비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동일 생활권은 고사하고 도심 내 재정착을 위한 이주대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임. 이는 결국 원주민 축출과 생활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
- 여기에 더해 해당 사업은 ‘물길 복원’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울산왜성 해자 복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 역사적 정당성 논란도 피하기 어려움. 왜성 해자를 복원해 관광 보트를 띄우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 사업을 과연 지자체가 추진해야 하는가와 함께 지역 역사와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종합하면 이 사업은 실현 가능성, 공공성, 절차적 정당성, 타당성 및 주민권리 보호 측면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2. 태화강 보트사업

- 울산시가 태화강에 50억 원을 들여 관광·교통용 보트를 도입하고, 매년 20억 원의 운영비를 투입할 계획임. 한강 수상버스가 안전성과 수요 부족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특히 울산은 버스 노선개편 이후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저상버스 보급률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시급한 교통문제가 산적해 있음. 그럼에도 실효성 떨어지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의문임.
- 이 사업은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추진되지만 대형 행사 명분 아래 일회성 과잉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과 함께, 향후 운영비 부담까지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에도 우려가 제기됨. 더 나아가 학성공원(울산왜성) 물길복원 사업에 보트 사업도 들어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 적정성을 더 따져볼 수 밖에 없음.
- 환경 문제도 따져봐야 함. 보트 운영을 위한 대규모 준설로 인한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 특히 태화강 바지락 서식환경 악화 가능성도 검토해야 함. 생태복원을 내세운 국제정원박람회가 오히려 생태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자기모순도 큼.

3. 공업축제

- 울산시가 진행 중인 공업축제는 부속행사를 포함할 경우 70억 원 규모에 이룸.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곳에서 공업축제를 맡고 있는데 해당 부서의 공업축제 예산이 36억 원, 일자리 예산은 38억 원인 상황. 별개로 공공일자리 사업비가 56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나 많은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따지지 않을 수 없음.
울산의 관광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축제가 지역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는지도 불분명함.
- 특히 울산은 최근 고용률이 특광역시 평균에 미달하고 여성 고용은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자영업 폐업률 역시 높은 수준임. 그럼에도 일자리 정책보다 축제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의 중요도와 긴급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짐.
- 경품 제공 등의 문제로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음.

□ 울주군수

1. 간절곶 식물원

- 울주군이 핵발전소 피해보상 재원 등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간절곶 식물원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함. 총 870억 원 규모로 순전히 군비로만 진행되는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이 0.499에 그쳐 공공사업 기준인 1에도 미치지 못했음. 용역보고서에서도 연간 약 23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울주군은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사업을 125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임.
- 울주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타 지자체들이 공공교통 확충 등 생활 밀착형 정책에 집중하는 것과 대비됨. 게다가 재원에는 시민 안전을 담보로 확보된 핵발전소 피해보상금이 있다는 것도 논란을 피할 수 없음.
- 결국 해당 사업은 지역의 실질적 필요보다 보여주기식 '랜드마크' 조성에 치중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시민 안전을 기반으로 마련된 재원은 대형 적자 시설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우선 사용되어야 함.

2. 신규 핵발전소 유치

- 울주군이 시민 안전을 외면한 채 '신규 원전 자율유치 신청'을 강행 추진 중임. 울주군은 공공기관을 동원한 서명운동과 불충분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주민 수용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만들어진 왜곡된 결과에 불과함.
- 특히 울산은 이미 고리·신고리·새울 원전이 밀집한 세계적 고위험 지역임. 여기에 추가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 생명과 지역 전체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정임. 더욱이 활성단층 존재와 지진 위험이 확인된 상황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원전을 유치하려는 것은 위험에 대한 고의적 외면이자 무책임한 행정임.
- 그럼에도 울주군은 경제적 지원과 지역 개발 논리를 앞세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음. 이는 시민 안전보다 재정적 유인을 우선시한 결정임. 시민 동의 없는 원전 유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울주군은 즉각 유치 신청을 철회해야 함.

□ 남구청장

1. 외항강 문학상

- 울산 남구청은 국내 최고 수준인 1억 원 상금을 내건 외항강 문학상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음. 지난해 당선작은 선정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출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발행 예정 물량도 1천 부에 불과해 실제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특히 이 중 상당수가 기증 물량으로 처리될 예정이어서 시장 유통을 통한 확산 가능성도 제한적임.
- 그럼에도 남구는 뚜렷한 성과 검증 없이 동일한 규모의 공모전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임. 이는 사업 효과에 대한 평가 없이 예산을 반복 투입하는 것으로, 정책 타당성과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됨. 지역 문화유산 홍보라는 취지 역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함.

- 결국 국내 최고액 상금을 내걸고도 기본적인 출판과 유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학상 제도는 폐지를 검토해야 함.

대구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제안단체	대구참여연대
문의	053-427-9780 / dgpeople@gmail.com

1. 낙동강 보 가동

- 낙동강에서 겨울철에도 녹조가 발생하는 등 ‘4계절 녹조라떼’가 현실이 되었음. 기후환경부의 조사에서도 4대강 녹조건수 중 74%가 낙동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낙동강보의 수문을 닫아 강물의 흐름이 정체됨으로써 발생한 현상으로 보를 개방한 영산강, 금강 등에서는 현저히 줄었다는 기후부 통계 등에서도 확인됨.
- 뿐만아니라 대구mbc와 경북대 연구진 등의 공신력있는 기관의 조사에서 낙동강 인근의 농작물, 가정집 수도필터 심지어 사람의 코 속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검출되는 등 대구경북, 부산경남 1,200만 시도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음. 낙동강 보로 인해 원수의 녹조라떼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임.
- 그럼에도 대구시는 낙동강 보 개방을 요지부동 반대하고, 기후부 또한 소극적임. 강으로 유입되는 여러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급한 것은 보를 개방하여 물을 흐르게 하는 것임. 대구시장 후보들은 낙동강 보 가동을 중단하고, 보를 즉시 개방해야 함.

2.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백지화

- 대구는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가혹하게 겪은 도시이나 영리를 앞세우고 위험을 회피하는 민간병원들은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되는 환자들을 받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고 정유엽 군 사건이 발생하였음. 최근에도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태아가 숨지는 등 유사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치료가능 환자의 사망율, 지역내 의료 불평등이 매우 높아 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음.
-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공공병상이 전체 병상의 5%밖에 되지 않는 공공의료 부족, 부실이 큰 요인이며, 코로나19 유행기 이들을 책임진 곳은 대구의료원 등 공공병원 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민들 절대다수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특히 의료 접근권이 취약한 동구권에 설립하는데 동의하였음. 이는 2021년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와 뒤 이은 대구시의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확인된 사항임.

- 이에 2022년 3월 권영진 당시 시장이 2028년까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약속하고 로드맵까지 발표하였으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취임 초 아무런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를 백지화하여 4년간 추진이 중단되어 있음. 시장 후보들은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재추진을 공약하고, 4년간 지체되었으므로 당선 즉시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함.

3. 박정희 우상화 사업

- 대구시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동대구역에 박정희광장 표지판과 박정희동상을 세웠고, 선거때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박정희공항으로, 대구엑스코를 박정희컨벤션센터로 명명하겠다는 등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및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음.
- 그러나 박정희는 일본 천황에게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군 장교로 일제에 부역하고, 굴욕적 6.3 한일협정으로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등의 친일행각은 알려진 사실임.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원조 내란우두머리이자 인혁당재건위 조작사건으로 민주인사를 사법적으로 살해하는 등 인권을 말살하였으며, 지방자치를 중단시키고, 유신헌법으로 종신집권을 도모한 독재의 화신임.
- 이런 인물의 동상을 세우고 기념시설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국채보상운동과 2.28운동으로 빛나는 대구의 민족민주 역사를 부정하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임. 동대구역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과 동상을 철거하고, 박정희공항, 박정희컨벤션센터 등의 공약도 철회되어야 한다.

4.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

- 대구시는 3년전부터 금호강 팔현습지에 304억 원을 들여 1.5km 길이의 산책로와 길이 886m, 높이 8m 규모의 보도교를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팔현습지는안심습지, 달성습지와 함께 대구의 3대 습지 중 하나로 구간 안에 하식애를 포함한 산지, 초지, 습지, 강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생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멸종위기 2급인 수리부엉이와 수달, 삿, 담비, 얼룩새코미꾸리 등 25종이 넘는 법정보호종 야생동물과 식물, 곤충 등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곳임.
- 작년 11월 기후환경부 장관이 주민 여론수렴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공사가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뿐임.

- 이 사업을 강행하면 환경파괴는 물론인 반면 주변 주민들의 통행로는 지금도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실익도 없다. 금호강 일대를 관할하는 대구시장, 동구청장, 수성구청장 후보는 팔현습지 보도교 사업을 백지화하고,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해야 함.

5. 졸속적 대구경북 행정통합

-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전에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통합단체장을 뽑는 것은 불가하게 되었으나 대부분의 시장, 도지사 후보들이 행정통합을 공약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정통합에는 주민의 숙의공론, 주민투표 등 주민의 결정권이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비과학적으로 부풀려진 장미빛 기대효과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기초시군의 자치권 보장 및 지역내 균형발전 대안이 부재할 뿐만아니라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과 난 개발 등을 견제할 법적 장치, 정치구조도 미흡함.
-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중단되어야 함. 행정통합이 지역발전의 유일한 대안인지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추진하더라도 주민의 숙론과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견제력 확보, 기초시군의 자치권과 재정권 보장, 정치독점의 해소 등의 선결요건이 확보되어야 함.

부산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제안단체	부산참여연대
문의	051-633-4067 / cham0528@hanmail.net

1. 풍피두센터 분관 건립 추진

- 초기 건립비 약 1,100억 원 외에도 매년 125억 원의 운영비와 60억 원에 달하는 로열티 지급 등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비공개 심의와 협약안 비공개 등 시민 및 지역 예술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더욱이 사업 부지로 선정된 이기대 공원은 1993년 군사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임. 이곳에 풍피두 분관을 포함한 8개의 전시관과 부대시설(도로, 주차장, 화장실 등)을 건립하는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난개발 사업임.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라는 명분 뒤에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무시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풍피두센터 분관 건립은 중단되어야 함.

2. 황령산 케이블카와 전망대 건립 추진

- 황령산 케이블카와 전망대 건립은 총사업비 2조 2,000억 원으로 전액 민간투자로 진행되는 사업임. 그러나 황령산은 보존 가치가 높은 비오톱(Biotope) 1등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추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었음. 부산 도심의 허파이자 중요한 자연자산인 황령산에 케이블카와 전망대를 건립하는 것은 생태계와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간사업자가 납부하는 공공기여분담금은 고작 3~5%에 불과한 민간사업자의 수익만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난개발 사업임. 황령산 난개발 추진은 중단되어야 함.

3. 해안가 유희부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여협상제 추진

- 공공기여협상제는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업용지, 준공업용지를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제도이나, 이 제도를 활용해 민간사업자들은

아파트 중심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부산지역 공공기여협상 대상지는 대부분 강변, 해안변으로 이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나 개발 이후 막대한 이익에 대한 기여는 없는 채 경관과 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중단되어야 함.

4. 낙동강의 철새를 떠나게 하고 낙동강 생태를 파괴하는 대저대교 추진

-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대저대교와 엄궁대교는 철새 서식지 등을 관통하여 국가 자연유산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업임. 더욱이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큰고니와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대모잠자리 서식 실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부실 평가 논란이 제기되었음. 또한 부산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시민단체와 함께 '대저대교 노선 선정을 위한 겨울 철새 공동조사·평가 협약'을 추진하고 대안 노선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변경 없이 대저대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자연유산 보호구역인 철새 도래지를 파괴하는 대저대교 건립은 중단되어야 함.

제주도지사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제안단체	제주참여환경연대
문의	홍영철 010-8299-4416 / eureka@jejungo.org

1. 도민 결정없는 제주제2공항 강행 추진

-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2015년 발표 이후 10년 넘는 기간동안 제주 최대의 갈등 사안이자 현안사안 임. 제2공항은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고, 강행 추진할 경우 제주의 환경과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갈등 해법은 주민투표에 의한 결정 뿐임. 따라서, 도민의 결정에 기반하지 않은 제2공항 강행은 제주도지사가 추진해서는 안되는 정책임.
- 제주제2공항은 문재인 정부 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최종 반려된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강행 추진되는 사업임. 송골과 용암동굴 문제, 조류충돌 문제 등 환경과 안전의 문제와 수요 예측 실패의 문제 등 10년간 제기된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찬반이 팽팽한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의 유일한 해법은 도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을 존중하는 주민투표 밖에 없음. 현재 주민투표의 요구 권한이 중앙행정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지사는 제주제2공항 강행 추진을 중단하고 도민의 의견을 물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주민투표를 강력하게 건의해야 함.

2. 한화애월포레스트 사업 허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 제주는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보전강화지역으로 정하고 있음. 한화그룹은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의 목장에 1,100실 이상의 숙박시설을 지으려하고 있으나, 해발 300m 이상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의 도시기본계획과 충돌하고 있음.
- 현재의 오염된 제주도정은 도시관리계획 수정(중산간 특별 2구역 신설)을 통해 한화애월포레스트라는 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고 있음. 제주도의회가 변경안 안건 상정을 보류하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임.

- 한화그룹은 제주에서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를 세우고, 민간 위성 제조(조립)하고 있으며, '아시안스페이스파크(ASP)와 연계하여 위성 데이터 수신하는 민간 주도 사업과 제주 남쪽 해상에서 위성을 발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들은 오영훈 도정에서 탐라대학교 부지 제공 등의 특혜를 누리면서 진행되고 있고, 지역 주민의 고용 효과 등은 매우 미미한 사업이고, 자칫 제주를 군사기지화로 이끌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함.
- 이러한 한화의 제주사업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의심되는 한화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지하수 함양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된 해발 300m이상 지역을 경계를 허물고, 제주를 생태환경적으로 파괴시키는 신호탄이 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중단하고, 한화애월포레스트 사업 불가를 선언해야 함.

3. 무분별한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

- 제주는 해상과 육상에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추진 중임. 대규모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추진되면서, 제주의 연근해 어업이 위협받고, 남방큰돌고래 등 바다 생태계의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해상 풍력은 해저에 말뚝을 받고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건설비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수심이 낮은 곳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려 함. 이 때문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는 기간 동안 해저면이 심각한 훼손을 받게 되고, 이는 어선과 해녀의 작업 공간과 충돌하면서 갈등을 낳고 있음. 대규모 풍력발전업체는 마을에 천문학적인 보상비를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보상비는 마을 공동체의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기도 함.
- 육상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도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 제주의 초원과 귤자왈 등 생태환경적으로 보전해야 할 곳에 길을 내고, 나무를 자르면서 풍력 발전기가 세워지고 임야와 농지를 잠식하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급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대규모 발전기업들이 공공자원인 풍력과 태양광을 사유화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보전해야 할 곳까지 훼손하고 있기 때문임. 이익을 줄더라도 보전해야 할 곳을 피하고 그 이익이 공공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함.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하고 소규모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함. 따라서, 사기업의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 발전사업이 환경과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허가해야 하고, 이익이 줄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함. 우선, 대규모 무분별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대한 허가 정책을 중단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함.

4. 돈먹는 하마, 제주-칭다오 화물선 운항

- 오염훈 도정이 개항한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는 당초 예측과 달리 선적 물량이 거의 없어(왕복시 컨테이너 1~3개 수준) 제주도가 선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 연간 약 72억 원 수준으로 3년간 약 216~200억 원의 혈세가 선사에 지불되고 있음.
- 제주~칭다오 노선은 행안부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으로 보고 있으나, 제주도는 조례를 근거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음. 오염훈 도정이 제주~칭다오 개항을 추진한 배경에는 제주에서 용암해수를 음료로 만들어 팔고 있는 '오리온'이 있다고 의심됨. 오리온은 제주에서 용암해수를 생수로 중국에 팔려고 계획했지만,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생수를 사기업이 생산하여 판매할 수 없음. 중국 측에서는 생수라고 표기해야 소비가 잘 될 것으로 판단하여 생수 표기를 주장하였으나, 그럴 경우 제주도 특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생수 표기가 불가하였고, 이 때문에 당초 계획했었던 생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예상했던 물동량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 과정에서 보더라도 오염훈 도정의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은 중국 측과의 엄정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앙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아 검증 기회마저 누락한 것임.
- 제주~칭다오 항로는 운항을 중단하고, 항로 개설 과정에서 발생한 검토 부실과 졸속 강행의 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5. 대중교통 BRT 졸속 사업 추진

- 오염훈 도정은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사업을 하면서, 인도를 축소하고 가로수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모의 섬식 정류장을 만들어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인지, 건설사업 활성화인지 혼동되는 사업을 펼쳐 왔음.
- 노선개편과 수송분담 등 대중교통체계에 근본적 변화없이 도로구조 변경 및 과도한 정류장 건설은 결국 대중교통개선 사업이 아니라 토목건설사업으로 변질되었음.
- 오염훈 도정은 이러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였음.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주도지사는 반드시 이 사업을 재검토하고, 전반적인 대중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참여자치연대
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_중단해야 할 **worst 34**개
정책

발행일 2026. 04. 22.
발행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담당 이은미 사무국장 02-723-5302 local@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펼쳐
온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Local

